

감 사 원

징계(문책)요구

제 목 면적 제한기준 초과 산지전용허가 부당 처리

소 관 기 관 해남군

조 치 기 관 해남군

내 용

1. 사건 개요

해남군은 2017. 12. 12. 해남군 표면 홍리 ㄱ 외 3필지¹⁾(생산관리지역, 면적 29,265㎡)에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(허가기간: 2017. 12. 12.~ 2019. 12. 30.)를 받은 주식회사 ■■■(대표이사 Q, 이하 “■■■”라 한다)가 2019. 3. 20. 이미 허가받은 산지와 연접한 해남군 표면 홍리 ㄷ, ㄴ(생산관리지역, 면적 1,212㎡)에 제1종근린생활시설(전기실) 부지조성 공사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자 같은 해 4. 18. 이를 허가하였다.

2.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

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,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관련 [별표 4의2] “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”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군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산지전용허가 기간 중에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신청한 경우 연접한 산지 중 생산관리지역에 소재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30,000㎡ 이상인 경우 허가할 수

1) 해남군 표면 홍리 ㄷ, ㄴ, ㄱ

없도록 되어 있다.

따라서 해남군은 산지전용허가를 신청받아 허가기준 적정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연접한 산지에 동일한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여 해당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0,000㎡ 이상인 경우 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3. 업무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

해남군 ▽과 R은 2019. 1. 2.부터 같은 해 7. 26. 현재까지 위 관서 같은 과 ㉠팀에 근무하면서 산지전용허가를 접수한 후 현장확인 등을 통해 허가가 적정한지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.

위 사람은 2019. 3. 20. ■■■가 당초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던 표면 하리 ㄱ 외 3필지와 연접한 표면 하리 ㄷ, ㄴ(면적 1,212㎡)에 제1종근린생활시설(전기실) 부지조성 공사를 위한²⁾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자 ■■■가 산지전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 중 “토지사용승낙서”를 통해 제1종근린생활시설(전기실)이 아닌 태양광발전시설인 전기실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고, 드론사진을 통해 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산지에 이미 다른 사업자가 설치한 전기실이 있어 ■■■가 이를 인수하여 본인이 연접한 산지(표면 하리 ㄱ 외 3필지)에 조성 중인 태양광발전시설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사실도 확인하였으며³⁾, 같은 해 4. 15. 표면 하리 ㄷ, ㄴ으로 현장확인을 나가 실제 현장이 위 드론사진과 동일한 것을 확인하였다.

2) R은 ■■■의 태양광발전시설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가 2019. 3. 20.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기 전 사무실로 찾아와 ■■■가 사용할 태양광발전시설인 전기실을 ■■■이 설치하였는데 이를 추가할 경우 산지전용 허가 면적이 30,000㎡를 초과한다고 하자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하였다고 감사기간 중 진술하였으나 문답 과정에서 그와 같이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당초 진술을 번복함

3) ■■■가 2019. 3. 20.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표면 하리 ㄷ, ㄴ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실은 ■■■에서 설치하였는데, ■■■은 태양광발전시설 중 전기실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2018. 1. 30. 산지전용허가(면적 1,702㎡)를 받은 후 2018. 2. 9. 건축신고를 하여 전기실 2동을 건설하던 중 전기실 1동을 ■■■에 양도하기 위해 2019. 1. 30. 신고 면적을 줄여(면적 1,702㎡→490㎡) 변경신고를 하였고, 이후 ■■■가 전기실을 사용하기 위해 2019. 3. 20. 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함

또한 위 사람은 ■■■로부터 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받을 당시 목적사업이 동일한 경우 30,000㎡ 이상의 산지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승인할 수 없다는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20조 제6항 [별표 4의2]의 규정을 알고 있었다.

그런데도 위 사람은 ■■■가 제출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■■■가 2019. 3. 20.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산지에 [사진]과 같이 전기실이 이미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결한 산지에 이미 태양광발전시설이 조성 중이던 사실을 확인하고도 ■■■가 당초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던 내용을 확인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면적이 30,000㎡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2019. 4. 18. “출장결과보고서”에 [사진]과 같이 태양광발전시설이 아직 설치되기 전인 2017년 11월경 현장사진을 첨부⁴⁾한 후 주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X 팀장 및 Y 과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그대로 결재를 받아 같은 날 ■■■에 산지전용허가 면적을 초과(허가 면적 30,477㎡=당초 29,265㎡+신규 1,212㎡)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하였다.

[사진] 실제 현장 사진과 출장보고서에 첨부된 현장 사진 비교

실제 현장 사진	출장보고서에 첨부된 현장 사진
	

자료: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

4) R은 당초 표면 허리 띠, ㄱ에 현장확인을 나갔을 때 출입문이 잠겨 있어 ■■■에 연락하지 않고 인근의 사진을 찍어 출장보고서에 첨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■■■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을 반복하기는 하였으나, 출장보고서에 첨부된 사진도 감사원에 의해 2017년 11월경 현장사진인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인근의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하는 등 그의 진술을 신뢰하기 힘들며,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미 태양광발전 시설과 전기실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실제 현장과 다른 사진을 첨부한 것으로 인정됨

관계기관 등 의견 R은 2019. 1. 2.에 산지전용허가 업무를 인수받은 후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미숙하게 처리하였으며, 인허가 건수가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고, 뒤늦게 잘못된 행정처분을 바로잡았으며⁵⁾ 고의가 아니었던 점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.

또한 해남군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.

징계요구 양정 동일한 사업을 목적으로 30,000㎡를 초과한 산지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승인할 수 없다는 관련 규정을 알고도 ■■■가 이미 허가받은 산지전용허가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고, 현장확인 보고서에도 실제 현장과 다른 사진을 첨부하는 등 산지전용허가 검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R의 행위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.

조치할 사항 해남군수는 동일한 목적사업으로 30,000㎡를 초과한 면적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승인하는 등 산지전용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R을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(경징계 이상)하시기 바랍니다.(징계)

5) 해남군 ▴과는 2019. 6. 25. 감사원으로부터 ■■■가 기존에 허가(면적 29,265㎡)를 받은 태양광 발전시설과 신규로 허가(면적 1,212㎡)를 받은 제1종근린생활시설(전기실)의 사업목적이 동일하다는 질의를 받아 같은 해 6. 28. ■■■가 기존에 허가받은 면적을 축소(29,265 → 28,765㎡)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(28,765㎡ + 1,212㎡ = 29,977㎡)이 30,000㎡ 미만이 되도록 처리함